

6·3 지선 본격화…민주, 텃밭서 ‘경선 모드’ 돌입

오늘부터 시장·구청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공천심사 개시…초대 통합특별시장 공천률 ‘촉각’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지선 입지자들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까지 경선 레이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천률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상황이다.

19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오

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에 기운되는 가운데 초대 특별시장과 교육감 각 1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84명, 기초의원 316명 등 429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 일정도 진행되고 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지

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시장과 구청장,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0일부터 시작된다.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 이뤄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로 흥보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어깨띠 착용과 공약집 발간도 가능해지며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이뤄지면서 정치권의 공천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부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재심위, 선거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꾸리고,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면접은 23~24일, 예비경선은 다음달 초 각각 시작될 예정이다.

텃밭인 광주·전남의 공천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당은 최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모 결과 5개 구청장 22명, 광역의원 61명, 기초의원 88명 등 171명의 접수를 마쳤고, 전남도당에서는 지난 12일 까지 692명의 신청서를 받았다.

시·도당은 지역구별 실사를 시작으로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검증, 컷오프, 후보별 가·감산 적

용, 중앙당 의결까지 거치면 경선 대상자 수에는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이율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 특별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도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6·3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공천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통합단체장 선거는 합종연횡, 기초단체장은 조별 경선, 지방의원은 가·감산 여부 등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윤석열 1심 선고 ‘유감’ 표명하는 정청래 대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빙글

민형배 “서부권 전력공사·중남권 K푸드공사 설립”

해상풍력·우주·반도체·AI 축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 제시 300조 투자 유치·RE100산단·무안공항·광양항 메가 물류 구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이 전남 서부권에 ‘전남광주 전력공사’, 중남권에 ‘K푸드산업공사’를 각각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전남 방문에서 제시한 권역별 성장 전략이다.

민 의원은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신성장 경제지도’를 발표했다. 서부권은 해상풍력·에너지, 중남권은 우주·농생명·동부권은 반도체·이차전지·수소, 광주권은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로 특화해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부권에는 지역 단위의 한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재

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운송·이용·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이 보유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중남권에는 ‘K푸드산업공사’와 한식대학을 세워 전남 농수산물과 광주의 가공·브랜드·AI 기술을 결합하겠다고 했다. 푸드테크와 식품바이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농생명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반도체·이차전지·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을 총괄 기획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겠다고 제시했다. 광주권은 AI와 미래모빌리티 중심지



로 육성해 전체 산업을 견인하는 두뇌 역할을 맡겠다는 전략이다.

300조원 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여섯 가지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환경 조성과 함께 특화 분야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기업 계약화를 신설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녹색환경이 공존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동부·서부·중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혁신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광양항을 수출입 거점으로 육성해 반도체·이차전지·철강 전환 산업과 연계한 메가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300조 기업 투자 유치 등 국가 전략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미래형 일자리가 넘치는 젊은 도시, 신산업 경제로 도약하는 전남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정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시장 취임 시 3개 청사를 6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시민들이 실제 운영 과정을 지켜본 뒤 실용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주정사 위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4명의 부시장을 둘 권역별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청년 500만원 모으면 1000만원 준다

기업·시 500만원 추가 지원…51명 추가 모집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기업과 함께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돋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 63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

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광주시 일

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윤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장과 함께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국힘 지선 공관위 이정현 위원장 등 10명 임명

季 “30·40대·여성 60%…계파·지역 고려 안 해”

국민의힘은 19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비롯한 10명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 본격 선거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원내 초선이자 여성인 서지영(부산 동래)·최수진(비례)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맡았다.

원외에선 법조인 출신인 윤용근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이 공관위원이 됐다.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43), 송서

(37),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42), 황수립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35)는 여성·청년 위원으로 공관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36)도 참여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30~40 대가 60%, 여성 비율은 60%”라고 폐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인선에서 계파와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혁신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